

FTA 동향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15년 연속 ISO 20000 인증 유지 - 국제적 수준의 IT 서비스 관리 체계 입증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영국표준협회*의 인증 심사를 통과해 ISO 20000 인증을 15년 연속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 영국표준협회(BSI :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005년 발표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보안 등 IT 서비스 관리 국제표준으로,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실사 과정을 통과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전자통관시스템은 2006년 통관분야로는 세계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 정기심사 통과로 1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적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의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가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통관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터키 원산지검증 급증에 신속대응으로 성과 - 상반기 197건에서 7~8월 18건으로 월평균 검증 대폭 감소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올해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월부터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검증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출기업들은 입증자료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된다.

관세청은 9월 10일(목) 터키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이같이 밝히고 터키 수출검증 동향과 업체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이 밝힌 터키 관세당국의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요청은 1,181건(442개사)으로 이는 전년 동기 73건(27개사) 대비 1,518% 증가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검증 대상을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75%)으로 비중이 높았다.



요청 사유중 제3국 무역거래 형태에서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요청된 검증이 855건(7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급증한 터키의 검증요청에 대응해 관세청은 신속한 검증 착수,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시행했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선별해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배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사소한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러한 노력 결과, 터키의 검증요청은 7월 12건(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상반기 월 평균 19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터키의 검증요청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등 원산지관리에 대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해외 통관애로 발생 시 연락처(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 부서	연락처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1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1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1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 031-8504-7020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어민 피해 우려
 - FTA 특혜관세 적용, 부당 수입업체 9개 적발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위해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원산지 세탁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임현철 원산지지원 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라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러시아산 냉동 대게]



[러시아산 명태로 가공된 북어채]



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우리 수출기업 철저 대비 필요

- 관세청, 한-인도 CEPA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적극 대응 노력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인도 정부가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을 앞두고 따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

관세청은 9월 17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도 재무부 규칙으로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의 원산지 관리 규칙(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약칭 : CAROTAR 2020)'으로 공고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①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 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FORM I *)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원산지 입증 정보(FORM I) :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목록

인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 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까지 요청하게 되므로, 수출기업들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 단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②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결정 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시에는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기에 사소한 실수로 특혜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검증 없는 특혜배제 사유 : 원산지증명서가 ①원산지 규정상의 서식과 불일치하는 경우, ②발급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된 경우, ③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발급된 경우, ④특혜자격이 없는 품목에 발급된 경우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초기에는 여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도 현지에서 파견된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우려사항을 접수하고 인도 관세당국자들을 통한 진행상황 파악 등 시행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인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설명회 지속 개최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관애로 발생시 도움 요청 연락처]

담당 부서	연락처
관세청 FTA 검증 지원 · 통관애로 팀	☎ 042-481-3233, 3232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1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1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1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 (91)11-4200-7064

자영업자도 이베이·쇼피·큐텐 등 수출 도전하세요

- 관세청,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에서 FTA까지 순회 교육 실시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입점 요령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대표적 업체인 이베이·쇼피·큐텐*의 담당자도 함께 설명에 나서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 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 이베이(ebay)는 미국, 쇼피(Shopee)·큐텐(Qoo10)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 수행사 중 한 곳인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부산에서 중소 수출입 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FTA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제는 ①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②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③관세환급의 개념과 방법, ④수출 후 부가세 및 회계 처리, ⑤이커머스 플랫폼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6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참석 비용은 없으며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1 상담을 좀 더 신속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였다.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1월 11일(수)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수출거점 지역에 파견된 관세관이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소제약 없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2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하였다.

* 미국(워싱턴, LA), EU(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 국가별 발표 주제]

국가	발표주제
미국	미국 코로나19 및 관세행정 주요이슈
EU	EU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관세행정 추진방향
중국	중국 코로나19 대응 및 통관 시 유의사항
일본	코로나19 시대, 일본의 대응 및 관세행정 주요 이슈
태국	태국 수출 시 FTA 상호대응세율 활용
인도	한-인도 CEPA 원산지관리 변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대응 수입물품 면세제도
베트남	최근 베트남 관세동향 및 이슈

노석환 관세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 등에 따라 수출입여건이 악화되고 신흥 교역국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 각국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비용은 무료이고,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의 공지·공고 사항 및 하단 팝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설명회접속 주소는 신청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한다.

신청 시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무료 상담을 좀 더 상세하게 받을 수 있다. 상담 진행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사용하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사전에 안내*한다.

* 설명회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 및 휴대폰으로 사용 방법 등 발송

[관세청 누리집 안내 및 신청화면]



코로나19 장기화 속 FTA, 무역흑자 유지에 버팀목 역할 - FTA 교역으로 404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아세안이 최대 -

올해 3분기말 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404억 달러 흑자,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 1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입 교역규모면에서도 FTA 비발효국과 교역액은 16.8%나 감소했지만, 발효국과는 5.3%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FTA 발효국과의 무역수지 404억 달러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4억 달러 흑자에서 24.4%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체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도록 해 FTA 교역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교역 충격 상황에서 전 세계와의 수출·수입은 각각 8.6%, 9.1% 큰 폭으로 감소한데 반해 FTA 주요 국가들과의 교역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세안과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235억 달러로 여전히 큰 흑자를 유지했다.

반면, EU로의 수출은 7.7% 감소했지만 수입은 2.9% 늘어나 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EU로부터 수입이 늘어난 주요 품목은 소매의약품 및 면역물품(백신), 독일산 자동차·명품가방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약품의 수요 증가와 해외 여행 위축 등에 따른 보상심리로 고급 소비재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3분기말 기준 발효국가별로 FTA를 활용한 비율은 수출이 74.5%, 수입이 79.4%로 집계됐다.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낮아진 74.5%, 수입활용률은 4.3%포인트 증가한 79.4%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 수입시 FTA 활용률이 85.0%로 전년 동기 대비 9.5%포인트나 높아진 효과로 분석됐다.



FTA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5.3%), EU(86.5%), EFTA(85.9%), 미국(84.5%), 수입활용률은 칠레(99.1%), 뉴질랜드(94.4%), 베트남(88.6%), 중국(8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동기와 비교해 수출은 ▲중국(7.7%p) ▲EFTA(1.5%p) ▲인도(1.3%p)에서, 수입은 ▲EFTA(15.0%p) ▲미국(9.4%p) ▲중국(5.8%p)에서 FTA 활용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화학공업제품이 3.1%포인트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수입활용률은 기계류가 9.5%포인트로 급증해 눈에 띈다.

일회용품과 방역용품의 주원료인 합성수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증가했고, 해당 품목의 FTA 활용률도 증가해 전체 화학공업제품의 수출 활용률을 상승을 견인했다.

기계류는 자동차·섬유 및 화학기계 수입시 FTA 활용률이 각각 98.4·90.0%로 높게 집계됐다.

특히 기계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70억불 → 77억불)해 기계류의 FTA 수입활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이와 같은 FTA 활용률 현황은 국가통계포털 및 관세청 YES FTA 포털에 분기별로 공개되며, 협정·산업·품목별로 보다 상세한 FTA 활용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첫 수출,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 관세청, 기업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온라인 생중계 -

A기업 등 7개사는 첫수출을 시도하거나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자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울산세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청과 협업해 이들 제조업체에 수출컨설팅, 금융 및 고용지원을 통합 제공했다.

그 결과 4개사가 22만달러의 첫 수출에 성공했고, 3개사 수출은 전년대비 368%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은 해외판로가 막혀 힘든 상황이었다. 반면, 비대면 소비는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글로벌 오픈마켓업체와 협업해 내수기업 88개사 포함 133개사 중소기업에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 지원 및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32개사가 입점에 성공하고, 20개사는 내수 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전국 세관의 기업지원팀이 중소기업 수출지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관 등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11월 13일(금) 15시 서울세관에서 수출 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

대회는 관세청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 활로 마련, K브랜드 수출 확대, 코로나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수출을 시도하거나 보다 성장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자신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원이 수출 판로 신규개척, 수출 경쟁력 향상,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수출경쟁력, FTA로 높이세요

- 관세청, 마스크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 지원 확대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재고 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섰다.

최근 마스크 공급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은 심해진 반면, 올해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의 16%만이 FTA를 활용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특히 올해초 이후 설립된 마스크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 공급자와의 경쟁을 위해 FTA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를 활용할 경우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미국, EU, 인도 등에서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절감할 수 있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0월 4,059개 마스크 관련 중소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말까지 FTA 활용실익이 큰 144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마스크 수출기업이 FTA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평균 2주가 소요되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 취득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FTA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대로 마스크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FTA 활용에 궁극한 사항은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CEP 원산지규정, 아는 만큼 혜택 크다

- 관세청, RCEP 발효 대비 FTA 활용 유의사항 당부 및 지원사업 추진 -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최종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기회요인이지만 원산지 규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RCEP에 따라 수출기업에 큰 기회가 열렸지만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할 것을 수출기업들에 당부했다.

우선,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 수출시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추가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인증수출자 :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에 관세청은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RCEP은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한다.

* 원산지 누적기준 :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리고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을 위해 RCEP 협정 발효에 대비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 궁금한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 확인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9일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최신 FTA 동향과 수출

입검증 위반사례 등을 소개했는데 178개 수출업체 담당자, 관세사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사후검증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업종별·지역별 간담회·설명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영국의 무역협상 동향

영국-일본 CEPA 원칙적 타결

현지시간 9월 11일, 영국 트러스트 국제무역장관과 일본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장관은 영-일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원칙적 타결을 맺었다.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국 기업은 일본 수출의 99%에서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영-일 무역협정은 기존 EU-일본 EPA(경제동반자 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와 비슷한 수준이나 디지털 트레이드 조항이 포함돼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영국기업이 일본에 서버를 설치하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Revolut 및 Transferwise 등 일본에서 운영되는 영국 핀테크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한다.

또한 영국기업의 라이선스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신청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영국 금융서비스의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및 철도 제조 지원을 통해 Nissan, Hitachi 등 영국 내 일본 투자자 지원을 위한 일본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규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영국 CPTPP 가입 진행

영국은 일본과의 자유협정 체결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CPTPP) 가입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CPTPP 가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 CPTPP 가입으로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관문을 제공하고 공급망의 탄력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며 무역 연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영국 트러스트 국제무역 장관은 현 CPTPP 위원장인 마르케스 멕시코 경제 장관과 함께 영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논의를 9월 9일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회원들과의 교역 상품의 95%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영국의 수출기업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을 꾀하고 있다.

또한 가입 국가간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무역, 데이터, 금융,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등에서의 무역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FTA 경험을 우즈베키스탄과 나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 협상 추진에 앞서 한국의 FTA 경험을 우즈베키스탄과 나누기 위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020. 10. 14(수) 14:00~15:30,
화상회의

이번 웨비나는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대외무역부 공무원, 경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산업부는 연대와 협력의 對개도국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통상역량을 지원하는 계기로 웨비나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산업부는 그간 우리의 FTA 추진 현황과 경제적 성과 등 한국식 FTA 경험과 모델을 공유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무역협정 추진시 시장개방과 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한국의 표준인증 및 적합성절차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였다.

양국은 무역·투자를 호혜적으로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거쳐, 공청회 및 국회보고 등 협상개시를 위한 우리측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우즈베키스탄과 협상개시를 협의중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10.14.)



EU-중국 간 투자협정(CAI) 힘겨루기 한창, 연내 타결 안개 속

EU-중국의 투자협정 추진 경과 및 동향

2020년 9월 14일 EU와 중국은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양측의 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과 인권, 교역,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을 논의했다.

Covid19에 따라 회담은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EU측은 샤를미셸 EU 상임의장,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참여했다.

양측 투자협정은 2014년 1월 최초 협상이 개시된 후 현재까지 7년에 걸쳐 총 31회 협상이 진행됐다.

EU는 역내기업의 투자보호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이 목적이며, 중국은 EU의 대중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자 역내기업 인수를 통해 EU 시장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양측은 투자분야만 한정해 협상하는 것이 아닌 교역, 기후변화, 인권 등 FTA 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포괄적(Comprehensive)으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EU는 교역, 지속가능발전 분야(기후변화, 인권) 등 다른 분야에 중국과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투자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참고 : EU-중국 투자협정 협상 추진 경과

* 양측 투자보호협정 협상 개시(2014.1월) → 협정 협상안 큰 틀의 합의(2016.1월) → 양측 협상 제안안 교환(2018.7월) → 협상타결 목표시한 2020년말로 설정(2019.4월) → 정상회담 협정논의(2020.3월, 6월 및 9.14일)



EU-중국 협상 주요 내용

양측은 투자분야에서 공정경쟁 투자환경 조성, 조달 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영기업 규제 및 공정경쟁 심사 관련 MoU를 2019년 4월에 체결했으며 공정 경쟁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EU 기업의 대중 투자 시, 중국기업과의 협력 (Joint ventures 등) 및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방안을 없애는데 협상의 초점을 두고 있다.

투자자 분쟁해결의 경우, 민간기구 주체인 기존 ISDS 방식* 대신 EU가 새로 도입한 독립적 투자 법원 방식(ICS; Investment Court System)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공조달 분야에 있어 양측은 중국의 WTO 정부조달 협정²⁾ 가입을 유도하고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펀딩 프로그램에 EU 기업의 참여제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참고 :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중재를 맡는 반면 ICS는 독립 법원에서 중재

이 밖에도, EU-중국 투자협정은 중국기업에 유리하게 마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철폐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중국의 국제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핀테크, 전자상거래, 은행 등 중국 금융기업의 EU 시장 진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유럽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은 거부되고 있어 양측 기업에 동등한 시장접근성 보장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다.

투자분야 외에도 양측은 시장접근 향상, 지리적 보호제 등 교역분야 및 인권,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교역분야에 있어 EU와 중국은 농산물, 금융서비스, 디지털 분야 내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200여개의 제품을 보호하는 지리적보호제³⁾에 서명했다.



2)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3) 지리적보호제(GI: Geographical Indications)

이에 와인, 치즈 등 100여 개의 유럽산 제품과 판진쌀, 생강, 백차(Anji White Tea) 등 100여 개의 중국산 제품이 보호받게 된다.

이 밖에도 EU는 기후변화, 인권보호 등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행동변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파리협정,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정에 중국 가입을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UN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EU는 중국정부의 신장지역 위구르족, 티벳인에 대한 인권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을 규탄하고 나섰으며, 양측정부는 이 안건에 대해 올해 중 협상을 재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료 :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현지 언론,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



중국 12월 1일부 '수출통제법' 시행

지난 10월 17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을 통과하고 오는 12월 1일부 시행키로 했다.

입법목적은 ▲전략물자(제품·기술·서비스 등 포함)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과 개인 제재 ▲대중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수출통제법>은 총 5개 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중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수출금지대상 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한다.

1. 수출 통제 품목

수출 통제 대상은 무기 등 군수품과 핵, 기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품, 기술과 서비스이다.

군수품 이외에도 군사용도와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자와 기술,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일반 기업도 '국가안보·이익 관련 물품, 기술과 서비스' 수출 시 법 규정을 따라야 하며 법규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수출 통제 품목은 중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에서 결정하며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수출허가제를 통해 관리한다.

2. 통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도

당국은 지정한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시행한다. '통제 품목'을 취급하는 중국내 수출기업은 법에 의해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임시 통제 품목 리스트' 내 물품, 기술과 서비스 수출 시, 수출기업은 수출통제 주관부처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시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명서는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 소재국(지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래 리스크가 존재하는 물품, 기술과 서비스는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 및 허가취득이 필요하다.

- 1) 국가안보와 이익 위협
- 2)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시설 설계, 개발, 생산에 사용될 경우
- 3) 테러용도

주관부처는 아래 8개 기준에 따라 수출 여부를 결정한다.

- 1) 국가안보와 이익
- 2) 국제의무와 대외약속
- 3) 수출유형
- 4) 품목의 민감성
- 5) 수출 목적지(국가/지역)
- 6)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 7) 수출경영자의 신용기록
- 8) 기타 법률법규 규정사항

3. 수출금지대상

중국 정부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을 훼손'한 기업과 개인은 '수출금지대상 리스트'에 올린다. 수출기업은

'수출금지대상 리스트' 내 수입업체, 최종 사용자와 거래할 수 없다.

당국의 허가 없이 통제 품목을 수출하면 벌금, 영업 정지, 수출자격 박탈 등 처벌을 받는다. 법은 '특수 상황'에 당국에 신청, 허가받도록 예외를 뒀지만 '특수 상황'과 '수출허가'여부는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수출금지대상 리스트' 내 기업 또는 사용자는 관련 문제 해소 시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통제 대상 품목을 수입,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외국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수출 금지대상'에 수출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자료: 중국정부망, 일본 닛케이신문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영국-일본 무역협정, 내년 1월 1일 발효

영국과 일본은 23일(금) 본격적인 협상 개시 약 4개월 만에 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지난 8월 협정에 원칙 합의했으나, 농산품과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추가 논의로 9월 중순 최종 타결하였다.

리즈 트러스 영국 통상장관은 다양한 도전과 짧은 협상기간에도 EU-일본 EPA 보다 더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자평하였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도 이번 협상 성공은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영국-일본 무역협정은 브렉시트 후 영국이 주요 교역국과 서명에 이른 첫 번째 협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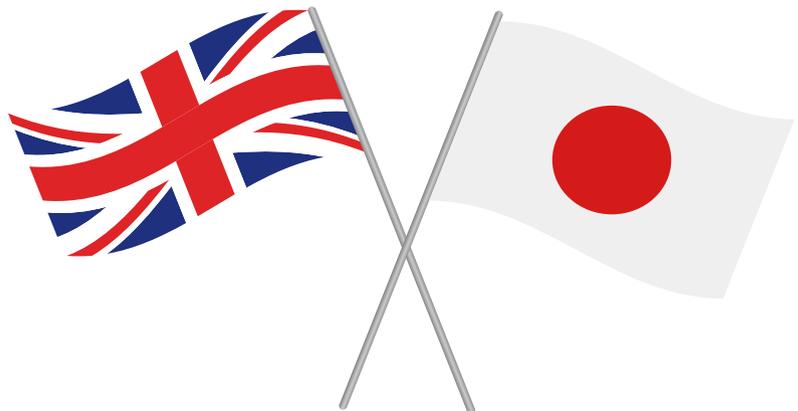
영국은 약 99%의 對일본 수출상품 관세 면제와 장기적으로 연간 약 200억 달러의 교역증가를 기대하고 있다.(2018년 대비)

또한, EU-일본 EPA의 관세 폐지 스케줄을 참조, 일본 자동차 관세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양측은 내년 1월 1일 협정 발효를 목표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토대로 11개 회원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은 영국의 CPTPP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자료: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코너속의 코너

코로나19에도 청정가전 수출 고공행진⁴⁾

-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연간 수출 최대 기대 -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청소 가전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이 수출증가의 원동력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5%(식기세척기)부터 71.5%(진공청소기)까지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이 8.6%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를 보였다.

공기청정기(59.3%)와 진공청소기(71.5%) 역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기질과 청결 유지에 신경을 쓰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의류건조기는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5억 6천만 달러가 수출됐다. 건조는 물론이고 탈취와 살균 등 기능까지 더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식기세척기는 올해 9월까지 22.5% 증가한 1억 7천만 달러를 수출했다. 외출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며 식기 사용이 늘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4~5월 일부품목 수출이 다소 주춤했으나, 6월부터 전반적으로 크게 반등하며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연간 수출도 모두 최대치가 기대된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한 주요 청정가전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의류건조기(비중 76.7%), 식기세척기(61.6%), 공기청정기(39.9%), 진공청소기(42.5%) 모두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다.



4) 본문의 글은 관세청 보도자료인 “코로나19에도 청정가전 수출 고공행진...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연간 수출 최대 기대”(2020.10.28.)를 바탕으로 재작성함